

김종철, 4.13 총선 관권선거 의혹 제기

행차위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 후보 지역에 현역 시도의원 도비 풀비가 18건 3억9,500만원이 풀려” 주장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 7)이 제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13 총선과 관련,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 도의원 풀비가 집중 풀렸다고 말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김 의원은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에 “대외협력국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4.13 선거에서 도 단위 관련 선거 개입 사실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선거관련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원택 국장은 “언론에서 일부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결과가 나오면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종철 의원은 또 “국회의원 후보 지역

에 현역 시도의원 도비 풀비가 풀린 사실을 들었느냐”면서 “선거기간 동안 전주 17건, 익산 1건 등 18건에 대해서 총3억9,500만원이 풀렸다. 과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사안 발생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돈을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풀렸느냐”고 말하는 등 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 졌다.

그러자 최영일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원택 국장을 향해 “직접적인 업무에 한해 대답을 잘해야 할 것”이라며 “김 의원 질문 의도는 잘 알고 있지만 업무적인 일에 질의하고 정치적인 색을 띠지 말아달라”고 제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발끈하면서 “대외협력국은 정부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라며 “예산이 집행된 근거를 갖고 질의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최영일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원택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다”며 정회를 선포, 상황정리가 됐다.

그러나 이날 업무보고는 총선 열기가 어느정도 식은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문질렀다고 김 의원이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련 토론회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난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사드 배치 연기 · 취소 · 국회 동의 택일을”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19일 대정부 질문 초록을 통해 “사드배치는 하나의 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정상의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로 경제가 흔들리고,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래서 평화통일의 길이 멀어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 과정에서 어떤 보고도 설명도 자료도 없었다”면서 “왜 국회는 배제됐고 서두를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충분히 토론은 했다. 열린 토론을 했다, 국익에 대한 검토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결정했어야만 된다”며 “사드배치가 국익을 크게 훼손한다면 초당적으로 국회가 나서서 재검토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사드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최소한의 책무다.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가지 선택지를 통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국주영은 “미사용 교통카드 잔금 회수 교통복지로”

‘장롱’ 속에 방치돼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대중 교통복지에 써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 회 회원 및 공익적 사용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주영은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현금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지난 10년간 전북의 카드 충전선수금은 40억 2,600만 원이며,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이 7억 4천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 또 “도민들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그 이자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향후 버스운송조합과 전북도가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공동 관리토록 협의 ▲실제 선불형 교통카드를 충전할 때 잔액과 잔액이 있을 때 즉시 환급을 위한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금을 환부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협의하여 홍보하는 노력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노력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카드 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전부터 교통카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서청원 전대 불출마 선언 최대 수혜자는 정병국 - 김용태 전망

친박계 맹형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정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단일화에 합의한 비박계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두 사람은 그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서 의원의 출마는 옳지 않다며 강력 비판해 왔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명분을 틀어쥘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또다른 비박계 유력 주자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커진 것도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나 의원은 몇몇 여론조사에서 당 대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등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서 의원이 출마하면 나가고, 출마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만큼 서 의원 불출마로 인해 나 의원 자신도 이번 전대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경환, 윤성현 의원 등 친박 수뇌부의 공천 개입 논란도 이들 비박 후보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친박들은 계파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최경환 윤성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계였지만 이번 당 대표 출마를 계기로 ‘탈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서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친박 표가 이 의원에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정현 의원도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서 의원의 친박 조지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뉴시스

힐러리 “트럼프, 역대 미국 대선 출마자 중 가장 위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화당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미 대선 출마자 중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클린턴은 이날 CBS뉴스 시사프로그램 ‘디스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테러범 가족 사살, 고문 부활 주장을 놓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태껏 본 적 없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자기 수양이 덜 됐고 자제력이 없다. 역사 의식도 없고 대통령 권력의 한계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선 출마자 중 가장 위험한 자라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난 그렇게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후보가 ‘기질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수차례 비판해 왔다. 그는 트럼프의 공약은 위험하며 유세 방식 역시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선을 앞두고 자신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를 격차기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관해서는 선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큰 의미 부여를 피했다.

이어 “근심에 빠진 국민들이 해답을 찾고 있다. 그는 간단하고 쉬운 답을 제공한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의 구호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뚤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클린턴은 국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짚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후보임을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그는 두려움, 불안, 좌절, 거부감이 팽배한 정치 환경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며 “투표할 때가 되면 누가 믿을 수 있는 후보인지 분명해 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발탁된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에 관해서는 부통령 후보 중 사회 문제에 대해 가장 극단적 견해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클린턴은 “최근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는 진화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트럼프도 기후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생각 없는 자들의 만남이 이뤄졌나 보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교사 연합(AFT) 전국 대회에 참석해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홀로 버려 둘 것”이라며 “펜스와 트럼프 누구도 아이들 교육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사드 배치 긴급현안질문 바라보는 성주군민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주군민들이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있다.

우병우 수석 연이은 구설... 해명 · 소송 맞불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 처가 부동산 매매 ·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에 부인 · 고소 등 법적 대응 더민주 · 국민의당 우 수석 해임 · 수사 착수 요구... 박 대통령 국면전환용 개각 앞당길 것 관측도

청와대 ‘실세 수석’으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연이은 구설로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최근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았던 데 이어 처가의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과 정운호 전 내이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의 표적이 된 상황이다.

물론 우 수석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이 우 수석과 청와대에 대한 의혹의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는 점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우 수석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직접 조사에 나섰던 인물이다. 이때문에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 임명됐을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지난 5월 본격화됐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해원 의원이 재향경우회, 어버이연합으로 이어지는 자금 지원 의혹에 우 수석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당시 백 의원은 “산남개발의 2014년과 2015년 배당 내역을 보면 각자 재향경우회에 2014년에 23억원, 2015년에 21억원을 배당했고 SDN홀딩스에도 같은 금액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흥컨트리클럽 운영사인 산남개발은 재향경우회와 SDN홀딩스라는 회사가 50%씩 투자해서 만든 회사다.

SDN홀딩스 지분은 기흥컨트리클럽 대주주이자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전 정경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사임하면서 아내와 자녀 4명이 20%씩을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다. 우 수석의 장모와 아내 등 처가가 보유한 기업인 셈이다.

앞서 재향경우회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는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해 오던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시기와 겹친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더민주는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의 배후에 우 수석이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한때 인사 교체가 잠정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지난 달 8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가운데서도 유임돼 박 대통령의 굳은 신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공세는 잠잠해졌지만 이번에는 진경준 사태와 정운호 게이트 등 정국을 감타한 법조비리 의혹들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이 회장이 네 달에 걸쳐 상속한 서울 강남역 사본 1,300억원대 부동산을 낙인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낙인은 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쥐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창업한 회사다.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심하던 차에 낙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덕에 우 수석의 처가는 수십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도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서둘러 법대 후배인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일 때문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승진 당시 낙신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법조비리로 구속된 흥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내이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이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흥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으며 정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다. 흥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 흥 변호사를 연결시켜준 법조브로커 이만희씨와도 우 수석이 어울려 다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우 수석은 일련의 보도와 관련해 잇달아 입장자료를 내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김정주 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김정주 이외의 낙신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서 “처가 민정수석이 진경준을 통해 낙신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또 “법정 해명 기사를 작성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속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운호와 이만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우 수석의 강력한 부인과 적극적인 해명과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과 진 검사장 구속 등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각을 앞당길 것이라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뉴시스